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철도 노동자도 4월 총파업에 함께 나서자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에서 4월 24일로 총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경제신문들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적반하장이다. 박근혜야말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다.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고 가계 부채는 대폭 늘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연금 개혁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한층 후퇴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4월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왜 4월인가?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다. 또, 4월 중에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구체 방안을 내놓고 공공부문 공격의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과 단협 개약을 통한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 철도도 예외는 아니다. 정상화 2단계 공격으

로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이 시작됐고 명예 퇴직 시행 계획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4월 “선제적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법안 상정 시”,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조건부 파업을 계획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파업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았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치기보다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反)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간 끌기와 이를 통한 김 빼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활동가들이 총파업 조직을 위해 나서자

총파업이란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박근혜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부문의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비록 4월 24일 하루일지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자신의 힘을 느끼며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부문별 파업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박근혜는 악랄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다. 지지율이 고꾸라지며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우리는 박근혜 취임 이후 최고로 싸우기 좋은 때를 맞고 있다. 이럴 때 노동자들이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박근혜에 대한 반감의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들은 4월 총파업 준비를 시작했다. 전교조는 4월 24일 전조합원 연가 투쟁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고, 건설노조도 4월 총파업 결의를 밝혔다.

철도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4월 총파업에 철도 노동자들이 동참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2013년 말과 2014년 상반기 투쟁으로 지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8·18합의안 부결이나 한상균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에서 보듯이, 철도 노동자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적 지도부 등장과 총파업 선언은 홀로 싸우다 좌절을 맞은 철도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철도노조가 4월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정상화 2단계 공격에 제동을 거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하자!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박근혜 총단결로 맞서자

박근혜 정부가 연말연시에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전면전 선포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공세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는 집요하게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공격 등 박근혜의 파상 공세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이한 공격을 받고 있는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정부가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는 아주 사악하게도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자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단결”, “연대”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노동자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4월 총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근속승진제 지키고 공공부문 ‘정상화’ 공격에 맞서자

올해 철도에서는 근속승진제 폐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그리고 화물 사업부제와 외주화 등 전 직종 구조조정까지 전방위적 공격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특히 근속승진제 폐지를 관철해 성과연봉제와 성과 평가에 따른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근속승진제로 편법적 임금 인상 특권을 누려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철도는 공공기관 30개 중 평균 근속연수가 3위인데도 임금 수준은 29위에 불과하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 심화, 비정규직 확대 같은 노동조건 대폭 후퇴를 낳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성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자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고 승진을 위해 관리자에게 줄서기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핵심 내용이자, ‘정상화’ 2단계 공격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런 정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다. 또,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철도 노동자들 상당수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처럼 4월 총파업 요구는 철도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물론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단협 개악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그 시한이 몇 개월 더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5~6월 단협 해지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싸우자고 미루는 게 최선은 아니다.

사실, 정부의 전술은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협 개악으로 추진해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 폐기 투쟁이라는 큰 전선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각개약진 하지 말고 단결해서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며 고립시켜 공격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4월 총파업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면 다음은 민간부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방어막은 그동안 ‘철밥통’ 비난 속에 위축됐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4월 총파업은 철도 노동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4월 총파업은 철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투쟁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에 나서는 것은 ‘철밥통’ 이기주의 비난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조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월 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5일 파업 경험 등으로 탄압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탄압의 수준은 결정적으로 파업 참가 규모에 달려 있다.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후보에 대한 철도 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보여 주듯, 총파업 조직에 적극 나서면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자!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010-7750-1876(이정원)